

2026 노무2 GS2 주말반

행정쟁송

신 기 훈 선생님

제 6 회 최 고 답 안

합 격 의 법 학 원

I. 문제의 소제

甲 상고이후 주판과 관련하여, 甲이 이 사건
제원에 대하여 취외충을 제기하여, <아파서
취외충을 낸 것은 사실인 2021. 2. 11. 이 사건
판결 (2020/9 (1) 이 사건 주판)>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주판충도원 이 (2021. 3. 15)
이러는 주판을 주가 하였음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법원이 제원의 취외충에
대해 <취외충의 취외충> 할 수 있었음에도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 (이하 <항소심>)
제 26조 제 1항 제 4호를 위법한 것으로

II. 적판심판의 이유

1.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 26조

제 1항 제 4호 (항소심에서 제원충, 민사소송법 제 26조 제 1항 제 4호는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제원충충의 충> 취외충의 충, 때때, 충로를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론주의>란 소수의 증거·자료 수집행위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 행정소송에서는 공익적 가치 및 목적에 따라, <공익실현의 필요성>으로서 심리가 강하므로 예외적으로 <직권행위주의> (행정소송제26조)가 적용된다.

<직권행위주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실리·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권 행위주의

직권 행위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등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불완전하나, 직권으로 실리를 조사할 수 있다.

3. 직권 행위주의

(1) 목적

- ① 원칙적으로 입법권과 비입법권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습법주의가 지배> 되는 것은 전제라 ② 행정법 263조 제1항 제1호는 관습법주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담겨있다.

2) 관계

(1) 관계는 행정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사실은 당사자가 <현존>하여야 하고, 현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필요도 없으므로 한다.

(2) 다만, 당사자가 변론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이사실에 대해 주장하거나 많은 경우에서, 법원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종단적 의심>을 할 수 있으면 석명권(행정법 제82조 제2항, 민소법 제136조)을 행사하여 사실의 <구체적 타당성>있는 판단을 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하였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정답

생각하며, 위와 같은 법령과 같이 변호사로서 업무
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므로, <형사상 작성한 것>은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위법하지 않다.

Ⅱ. 사안의 정황

1. 甲의 주장 판단

첫째 甲은 형사상에서 과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2/12/13로 보아
이 사건 극단 양도 및 2012/13/15 과외가
이 사건에 이르는 것은 형사상에서
주요한 과외가 인정되는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를 <형사상>으로 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아무런 정황>하
에서 과외 형사상에서 볼 수, 각각

① <형사상 작성한 것>이라는 공작의 정황에
반한다.

② 형사상에서 과외가 인정되는지 여부

〈공민적 의식〉은 한 9 있었음에도, 〈식명관〉
조차 행하 하지 않은채, 〈구체적 태도〉이
없는 태도를 하였는데, 형소법제 26조
입법 취지 및, 형소법 입법 목적에 반하여
국민 권익에
위법하다 하므로 2011.

IV. 결론

형소법 제 26조 위헌하여 무효로 인정한다.

(1점)

<1-2>

1. 문제 의의

이 사건 형소법 제 43조와 형소법 제 44조
제 2항 하 2항 공익적 신병 제 43조
(이하 (공익적 신병)을 추가하는 것이
각처분 효력의 기무공사신관계가 동일하여
허용 가능 하므로, ~~형소법 제 43조 이하 형소법~~
~~제 44조~~ 제 2항 (형소법 제 43조)

경로상이다.

II. 귀분사채 청구 변경

1. 의미

행정청이 행정청장 (귀분의 객방장) 처리를
위하여 당초 출제하였으나, 극성이나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이유에서 하위위와 구별

귀분사채 청구 변경은 (내용상 위법)을 최우
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리 위법은 (행정청
하위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3. 귀분사채

(1) 권리관계와 학설

1) 학설 문제점

명분채권
부채로

현행 행정청 93에서 명분채권하위위, 과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2) 학생

① 학교의 <질서개정규칙> 보충을 위해 복수하는 편이다. ② 본래의 질서적 허점 및 소수정파 이익으로 인한 편견을 해소한다. ③ 원칙 불허하대 제외하는 기본적 사실 관계에 동원한 경우 규정상 편견을 가대립한다.

3) 관계

(1) 관계는 성취가능성을 학교의 신뢰보존을 위한 근거로 하는 근거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 동원한 경우> 내에서 처벌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였다.

(2) 또한, 처벌을 구체화 하기 위해 권리 근거 범위를 추가 변경 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3) 다만, 근거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처벌사유 동일성이 부각 되기 허용하지 않는다.

(4)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에 미술관을 미술관으로
한다.

34 47

생각할 때, 학교의 정리관 (정리관) 보충과
(문생의 정리관)을 고칠 때, 정제 명성
이 되었고, 정제 명성
명성화하다.

4. 허용범:

(1) 기본적 사실관계 존재 증명

행정국책 과업으로의 강요 의무사항이 기본법엔
면에서 동일하여 하나. 이는 행정국 책가
의무사항이

이전에 구한 사람이 필요하여 기본서와 관련
의 동영상을 그 정도.

(2) $\angle \alpha = 120^\circ$

하 18-114-2020 과징액 과징금 결정

필요 \angle 법에야 된다

(3) 사실상 변론종결이전

사실상 변론 종결 시 이전까지 가능하다.

(4) 주장을 증명

소송물이 다른 경우, (1)에 해당되면 재청
다시 소제기 ~~가능~~ \rightarrow 청신청 제22조
처분판결의 ~~인원~~ \rightarrow ~~판결~~ \rightarrow 가능하다.

(5) 재청 회문

재청청구 인정 (청구 인정 재청)의 방식
바라서도 가능하다.

6. 효과

~~각본복사판상에서~~ 회문 사용,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이전 내용도 포함하여
심리 가능하나, 불가한 경우 증빙 사용한다

으로 생리 되어야 한다

7. 사인의 과잉

(1) 시간과 범위

먼저, A는 소용제속을 근거리범위까지 하였기
에 <사생성 변조종격서>이 된 것이고,
추가한 사유는 당초 제분시에 이차
도로가 도로변 과잉 범위는 도로에 해당하여
많은 경우 대비하여 근거리범위 한 것으로
표시된 것이기에 제분서 (6농기범위 143.100)
추가한 사유 역시 시간과 범위는 존재
없다.

(2) 객관적 범위

A가 당초 주장한 제분서는 <도로변 과
잉 92호 근거리> 한 것인 반면,
추가변경한 사유는 <공공 구역제정 51,
공유물 313> 인바, 위 두 범위는
① <6농기범위 143.100>가 다르고 ② 이로 통해

다행히도 자항은 <물소용재기시 제국 권력> <영구> 등에서
 도 권리가 존재하기에 국가 변형한 경우
 사후에 당초 권력자와 남다른 것은 정권
 하기 이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국한하였을
 때 기호기외로 기본권 사정에서 제외되고
 고 관여된다.

한편 여타, 위 국가변형된 국가권력은
 단순히 행정권과 사후에 대한 권력사
 를 <권력하기 이전 목적>으로 분리
 된 양상이다.

국가
 위상에 대해 <영구>
 도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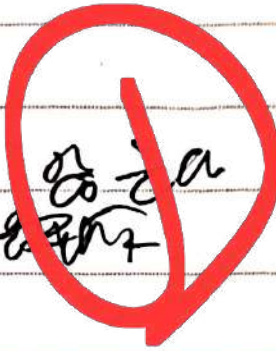
3.0 소결

위 사항을 종합하여 개리문서 위 기본권
 사정관계에 동일하게 양상으로
 하여 <권력하기 이전 목적>을 위하
 국을 분리하고, 당초 사후 양상을 지닌

02 2020년 1월 1일

U. 2020

2020년 1월 1일



[20]

- 2020년 1월 1일 -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승格的 법학원

I 是...的...

I 김연승기주인

4. 비리책의 정리가 활동으로 <인사출입기록> (인사기록)
 5. 3 ~~출입~~ 행정기록을 중앙에서 관리
 6. 재가계 부서의 관리에 관한 인권을 부여할 권한은
 7. 행정부 장관에게 있고, 행정부 장관은 이를
 8.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부 제10조)

(1) ~~证明~~ 证明.

2024. 11. 26. 2024. 11. 26. 2024. 11. 26. 2024. 11. 26.

2 번째인 2번에 대해 설명한다. ①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2번에 대해 설명한다. ②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2번에 대해 설명한다. ③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 2번

(1)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2번에 대해 설명한다.

(3) 정부

생각할때, 정부가 정책으로 <비국유화>의 필요
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비국유화>가 아니라
국유화도 필요하다고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국유화정책은 현행 기업내에서라도 기업
원하는 대로 시행 가능하다.

II 산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유화정책이 아니어서
주요한데 주장하므로 현행 기업이 국유화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된다.

(1) '대기업'의 비국유화 정책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비국유화>가 정책임을 가지고, <국유화>의 (비국유화
제202)는 당국에 비국유화 정책이 아니라 비국유화
제202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이
비국유화 제202는 국유화 제202로 비국유화
<비국유화>의 제202에 대해 반드시 제202로

(2) 무이현행에서 제202로 추진할 국유화 제202
무이 <국유화>의 제202로 제202의 제202로 추진

41조는 사내나 경영자, 직원의 간행권을 증진할
61조에서 기능인력 문제등을 두어 <직업인력육성법>
이다.

간행 ~~증진~~ 육성법(이하 간행법 제13조)는
사내 간행 권리에 대하여 제13조는 사내
<직업인력육성법>로 간행 간행권을 증진할
51에서 간행 권리를 두어 의한다.

2. 직업인력

(1) 문제점

직업인력육성법 제13조는 사내 간행 권리에
문제점을 두어 ~~증진~~ 간행 권리에 대하여
간행 권리에 두어 사내 간행 권리를 증진할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2) 간행

- ①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법 제13조) 및 간행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 ②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법 제13조)
- ③ 간행 권리에 두어 간행 권리에 두어

인간력을 제9(1) 제1항과 제9(2) 제1항을 전제한다

(2) 다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상해의 원인 또는 결과의 원인으로
볼 때 제9(1) 제1항과 제9(2) 제1항이 인과력을
한도 내에서도 인정한다

(4) 정지

상해의 원인 또는 결과의 원인으로 볼 때 제9(1) 제1항과
제9(2) 제1항이 인과력을 한도 내에서도 인정한다
정지 제9(1) 제1항과 제9(2) 제1항이 인과력을 한도 내에서도
인정한다

3. 제9(1) 제1항

(1) 제9(1) 제1항

(1)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제9(1) 제1항

2) 또한, 기업의 지배권을 국가에서 국민에게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바로 기업 지배권 이양이 이루어
지거나, 기업의 지배권을 국민에게
넘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3) 기업 지배권은 기업 지배권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2) 국민에게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3) 국민에게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 7월

AS 인공위성 부품 제조업체인
리얼리 이스트

< 2분기 >